

〈특집〉

## 『서울대학교 法學』 50년의 성과와 경향: 국제법 분야

李 根 寬\*

### I. 서론

1959년 법학지가 창간된 이래 반세기가 흘렀다. 지난 50년 간의 성취를 회고하고 미래의 과제를 짚어보는 이 글을 작성하면서 필자는 지난 반세기의 법학지의 발전이 한국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궤적을 같이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법학지가 출범할 즈음의 한국 국제법학계의 척박성은 1956년 이한기 교수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고 나서 반년을 경과한 시점에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유학 시절의 컬럼비아 대학의 훌륭한 시설과 분위기를 그리워하면서 필리핀보다 못한 당시 한국 대학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개탄하고 있다.

마닐라 大學은 各單科大學이 한 캠퍼스 안에 있고 명실공히 종합대학의 면목을 갖추고 있다는 比律賓 視察者의 소식 그리고 동대학교수들의 俸給은 약 600페소 美貨로 300불 정도이며, 2개월에 한 번씩 Law Review가 출간되고 있다 하니 比律賓學者들의 生活安定과 研究의 활발함을 窺知할 수 있다.<sup>1)</sup>

그 후 한국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국제법학도 양과 질 두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룩하였다. 국제법학회논총 이외에도 서울국제법연구, 국제법평론 등의 전문학술지가 발간되고 있으며,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구유고전법재판소 등의 국제법 관련 기관에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특히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 규정(Rome Statute)에 관한 외교회의에서 한국이 펼친 활약은 한국 국제법학의 성장을 웅변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부교수.

1) “인화와 협동으로 학문은 자란다”, **대학신문** (1956.10.8) (『迎瑞堂記: 이한기 수필문집』 (서울: 박영사, 1986) 所收).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제법학이 아직껏 우리가 당면한 국제법적 과제를 한국적 시각에서 창의적으로 파악·분석하는 방법론을 획득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와 세계의 국제법담론에 나름대로 영향을 끼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국제법학은 아직도 선진국의 학풍을 소개하는 단계”에 정체되어 있다는 이상면 교수의 진단(1987년)은 2009년의 시점에서 보면 다소 엄혹한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 국제법학이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배전(倍前)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점을 부인키는 어려울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59년 법학지의 창간 이후 이 학술지에 게재된 80여 편의 국제법 관련 논문을 개관하고, 이들 논문에서 발견되는 공통적 지향성을 밝혀낸 후,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다양한 주제에 관해 다양한 시각 하에서 작성된 논문을 고정된 틀 안에 묶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기 교수를 주축으로 형성된 서울대학교 국제법학을 관류하는 일정한 흐름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II. 법학지에 실린 국제법 논문의 내용적 개관

한국법의 다른 주요 법분야는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법의 경우 이러한 구분이 쉽지 않아 대부분의 학교에서 국제법 1, 2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제법 총론, 각론으로 나누어 강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는 국제법의 법적 성격(특히 하트의 이른바 ‘2차 규범’의 결여 여부) 및 방법론과도 긴밀히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학지에 실린 80여편의 논문을 총론, 각론의 체계에 따라 구분하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주제 분류방식을 참고하여 필자 나름대로의 구분에 기초하여 논의를 진행시키기로 한다.

### 1. 국제법방법론

법학지에 실린 국제법 논문 중 방법론이란 단어를 제목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그 내용 면에서 방법론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천착하고 있는 것이 여럿 있다. 먼저 이한기 교수는 한국국제법학 30년을 회고하는 글의 모두에서 “한국법학 삼십년을 회고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그 방법론”임을 전제한 후 특히 국제법 30년의 회고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어떻게 수용했는가

의 문제와 결부시켜” 논의를 전개하였다.<sup>2)</sup> 이한기 교수는 특히 독도 문제에 관한 일련의 논문을 통해 오늘날 구미 국제법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국제법에 대한 탈식민지주의(post-colonialism)적 접근의 선구적 모습을 극명한 형태로 보이고 있다. 1953년 땡끼에 땡 에끄르오(Minquiers and Ecrehos) 사건에 대한 ICJ 판결에 대해 정치한 분석을 행한 후 그는 “근대 국제법은 본질에 있어서 Europe적인 것이고, Europe의 강대국이익에 봉사하게끔 형성된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sup>3)</sup> 그는 계속해서 “영토분쟁을 국제법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낡은 전통법규의 적용에 의한 해결을 가르키는 것이라면 애당초 그것은 무의미한 일”<sup>4)</sup>임을 지적하며 “Asia인은 Asia의 역사를 중시하며 이곳에서 고유한 국제법의 원칙을 발견하기를 희망”<sup>5)</sup>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한기 교수가 전개한 아시아적·탈식민지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접근방법은 그의 다른 저작을 관류하는 ‘통주저음’(continuo basso)을 형성하고 있으며 백충현 교수를 비롯한 그의 후학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학문적 자장(磁場)으로 작용하였다.

1978년 노명준 교수는 ‘국제법과 금일의 과제’라는 글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아프리카 제국(諸國)의 등장으로 인한 전통 국제법에의 도전을 배경으로 우리 국제법학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우리 국제법학계가 “대부분 선진국 특히 일본이나 구미의 국제법이론의 소개나 답습에 그쳤을 뿐 ‘자아준거적 국제법이론’의 정립에 등한히 한 것이 사실”임을 뼈아프게 자성한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sup>6)</sup> 한국 국제법학의 서구추수적 경향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어 1987년 이상면 교수는 “극히 제한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국제법학은 대체로 선진국의 발전된 학문을 소개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국제법학의 “후진적인 성격”에 대한 그의 비판은 계속되어 “논문의 경우에도 오리지널한 연구가 적고 대부분이 외국의 학문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점이 흐리거나 결여된 것이 많으며 자료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외국의 학자가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기본적인 연구 자세와 방법상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였다.<sup>7)</sup>

2) 이한기, “한국국제법학 삼십년의 회고”, **법학** 제19권 제1호 (1978), p. 151.

3) 이한기,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의 연구 - 독도문제에 관련된 「실효적 점유」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법학** 제9권 제1호 (1967), p. 36.

4) 같은 글, p. 36.

5) 같은 글, p. 37.

6) 노명준, “국제법과 금일의 과제”, **법학** 제19권 제1호(1978), p. 161.

국제법학 방법론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국제법법원론에 대한 논의는 의외로 적어 1981년 장효상 교수가 UN총회결의의 효력을 다루고 있고,<sup>8)</sup> 이상면 교수가 국제기구 내에서의 입법과정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sup>9)</sup>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김화진 교수가 법경제학적 시각에서 국제법의 준수 문제를 다룬 바 있다.<sup>10)</sup>

## 2. 국제법 수용사

법학지에 실린 국제법 논문의 국내 저자들은 대체로 이한기 교수와 그의 후학이 주축을 이루었다. 따라서 ‘기당 국제법학’의 접근방법, 특히 동아시아인에게 유럽국제법이란 무엇인가 또한 유럽국제법은 동아시아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 수용되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한기 교수의 학문적 관심을 추동한 것은 19세기 후반 이후 아시아에서 왜 유독 일본만이 서양세력의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고 성공적으로 근대국가를 건설하였는가 라는 의문이었다. 1975년 논문에서 기당 선생은 “이와 같이 개국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국가는 일본뿐이며 기타의 아시아 국가는 거의 다 이 문제에 실패하였으니,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sup>11)</sup>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국제법이 과연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구명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sup>12)</sup> 이 논문 및 1980년 논문의 결론에서는 일본의 성공 및 한국의 실패의 요인을 일곱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막스 베버(Max Weber)의 보편역사(Universalgeschichte)적 의문(“왜 유독 유럽만이 근대화에 성공하였는가?”)의 동아시아적 변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의문이 단지 안이한 역사적 호기심에서 제기된 것이 아님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이 질문은 “일제 시대에 운명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 식민지 상황 속에서” 성장

7) 이상면,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제법학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갈 길”, **법학** 제28권 제1호 (1987), p. 89.

8) 장효상, “UN총회 결의의 효력”, **법학** 제22권 제1호 (1980), pp. 102-135.

9) 이상면, “A Recent Development in the Law-Making Proces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Single-Text Procedure”, **법학** 제25권 제4호 (1984), pp. 207-221.

10) 김화진, “국제법은 언제, 왜 지켜지는가? —준법문제의 경제학적 어프로치와 신용이론에 관한 에세이—”, **법학** 제45권 제2호 (2004), pp. 419-449.

11) 이한기, “한국과 일본의 국제법 발달에 관한 약간의 비교적 고찰 —특히 일본의 국제법 발달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20권 제1·2호, p. 206.

12) 같은 글, p. 207.

하면서 辛酸과 苦楚를 경험한 바 있는 후진국 지식인의 실존적 고뇌에 가득 찬 문제제기였던 것이다.<sup>13)</sup> 1854년 일본의 개국 이후 22년에 걸친 “한국에 대해서는 절망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세계 정세와 군사지식에 스스로 맹목이었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병인양요(1886) 및 신미양요(1871)에서의 승리에 “터무니 없는 승리감과 척양·척화의 고집을 자랑하고 선전하기에 바빴”던 것을 통렬하게 비판하면서,<sup>14)</sup> 신미양요 시 차라리 조선이 미국 함대에 패했더라면 조선의 개국이 앞당겨지고 동아시아의 역사전개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역사적 가정을 하고 있다.<sup>15)</sup> 이러한 가정은, 근대화의 좌절이 한국 사회에 가져다 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난에 대한 통렬한 역사인식의 발로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당선생의 문제의식은 법학지라는 장에서 배재식 교수와 이상면 교수에 의해 계승·천착되었다. 배재식 교수는 1980년 ‘한국에서의 국제법의 생성(I)’이라는 글에서 1870년 이후 서양국제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 법체계 속에 수용되고 또는 변형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그것이 현실로 한국의 전통적 국가체제와 대외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적용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추적하였다.<sup>16)</sup> 이상면 교수는 네 편의 영어 논문을 발표하여 19세기말 한국의 국제법 수용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다.<sup>17)</sup>

### 3. 영토 문제

해방 이후, 특히 1952년 이른바 ‘평화선’의 선포 이후 한일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독도 문제이다. 1954년 이후 일본은 독도 문제의 해결을

13) 이한기, “古稀 有感 - 나의 학문 나의 생애”, 迎瑞堂記: 이한기 수필문집 (서울: 박영사, 1986), p. 4.

14) 이한기, “한국과 일본의 국제법 발달에 관한 약간의 비교적 고찰 - 특히 일본의 국제법 발달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문집 제20권 제1·2호, p. 217.

15) “만일이라도 Rogers 제독의 행동이 Perry와 같은 성공을 거두었다더라면 그 후의 이 나라와 극동국제사회는 좀더 다른 각도로 균형을 취하면서 진전되고 개발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같은 글, p. 218.

16) 배재식, “한국에서의 국제법의 생성(I)”, 법학 제21권 제1호(1980), p. 7.

17) Sang-Myon Rhee, “Korean-American Treaty and Sino-Korean Relation”, 법학 제23권 제4호 (1982), pp. 63-120; “Korean Attitudes toward International Law before the Opne Door to the West”, 법학 제24권 제2·3호 (1983), pp. 264-290; “Korean Attitudes toward International Law after the Open-Door to the West(I)”, 법학 제28권 제3·4호 (1987), pp. 199-218; “Korean Attitudes toward International Law after the Open-Door to the West(II)”, 법학 제29권 제1호 (1988), pp. 109-116.

ICJ에 부탁할 것을 제안하면서 한국 정부에 상당한 외교적 압박을 가해 왔다. 이 문제는 한일 간 국교정상화 과정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1950년 중반 이후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에 유리한 사료 등 증거의 수집과 강력하고도 정치한 국제법적 논리의 개발은 한국 국제법학계에 부과된 제1의 과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한기 교수는 이 분야에서도 선구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가 1969년 ‘한국의 영토’라는 책자로 출간되었다.<sup>18)</sup> 이 책에서 ‘독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현실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장에서 영토문제에 대한 현대국제법상의 변화양상을 지적하면서 독도문제에 내재하는 ‘정치적 성격’을 지적함으로써 1954년 이 문제를 ICJ에 부탁하지는 일본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 것이 국제법이나 국제의무에 위반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독도문제의 해결을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섯 가지 방안(사법적 해결방법, 미국 등 제3국의 조정 등에 의한 정치적 방법, 한일간의 직접적 교섭에 의한 외교적 방법, 현상을 묵인하여 유지하는 방법, 독도폭파설)의 장단점을 언급하고 있다. 12세의 어린 나이에 광주학생사건에 연루되어 “형언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고 평생을 통하여 한국민족주의의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였던 기당 선생은 한편으로는 일본의 주장을 격렬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 “韓民族의 일본에 대한 nationalism이 獨島로 인하여 小兒病的으로 爆發되어서는 안된다”<sup>19)</sup>고 강조하고 있다. “共產主義라는 共同의 敵에 對處하기 위하여 더욱 緊密化의 過程을 밟으리라고 展望되는” 한일관계에 비추어볼 때 양국은 “互惠的 立場에서 獨島問題의 合理的 解決方法을 반드시 찾아내야”<sup>20)</sup> 하며, 이 방안은 결국 “主權의 問題와 漁業의 問題를 각각 따로이 分離하여 그 獨自的인 解決을 摸索하도록 努力하는 것”<sup>21)</sup>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한기 교수는 1967년에 맹끼에와 에끄르오 사건에 대한 매우 정치한 분석을 행한 논문을 법학지에 발표하였는데 이 논문의 상당 부분은 1969년의 책자에 편입되었다. 그는 또한 독도 문제의 국제재판부탁가능성과 관련하여 국제분쟁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행하였다. 1968년 법학지에 발표된 논문을 통해 국제분쟁의 구분론(법률적 분쟁과 정치적 분쟁의 이분법)을 고찰하면서 “독도분쟁

18) 이한기, **한국의 영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19) Ibid., p. 307.

20) Ibid.

21) Ibid., p. 308.

도 역시 정치적 성격의 법률론이 지배적인 정치적 분쟁의 양상을 강하게 띠고” 있음을 지적하였다.<sup>22)</sup> 이한기 교수의 학문적 관심과 접근방법을 계승·발전시켰던 백충현 교수는 1982년 ‘영토분쟁의 해결방식과 증거’라는 논문을 통해 그 때까지만 해도 한국학계에서 깊이 다루지 않았던 영토분쟁에 있어서의 증거법 문제를 깊이 분석하였다.<sup>23)</sup> 이상면 교수는 2001년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정면으로 또한 종합적으로 다룬 글을 법학지에 발표하였다.<sup>24)</sup>

#### 4. 해양법

해방 이후 한국의 국제법 실행 중에서 국제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을 들라면 1952년의 평화선 선포와 1953년 반공포로 석방<sup>25)</sup>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평화선 선포의 문제가 응변적으로 말해 주듯이 해양법과 관련된 문제는 1950년대 이후 한국 국제법의 중요한 과제였다. 이한기 교수의 회고에 의하면 대한국제법학회의 업적 중 외무부 및 통일원への 자문을 들고 있는데 총 7-8건의 자문요청 중 세 건이 해양법에 관한 것이었다.<sup>26)</sup>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법학지에도 반영되어 모두 9편의 해양법 관련 논문이 게재되었다. 법학지에 실린 최초의 국제법 관련 논문은 배재식 교수가 작성한 코르푸 해협사건에 대한 소개 및 평석이었는데 이는 군함의 해협통항 문제를 다루고 있다.<sup>27)</sup> 배재식 교수는 1980년 초에 새로운 해양법 하에서의 군함의 지위를 논하는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sup>28)</sup> 박종성 교수는 1977년 당시 제3차 UN해양법 회의와 관련하여 크게 문제가 되고 있던 대륙붕제도를 다룬 글을 발표하였다.<sup>29)</sup> 1980년대 초반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이상면 교수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던 ICJ의 해양경계획정 사건에 대한 일련의 평석을 발표하였다.<sup>30)</sup> 계속하여 그는 해양경계선상의 에너지 개발에 따르는 문제,<sup>31)</sup> 경제수역

22) 이한기, “국제분쟁과 재판 - 독도문제의 재판부탁성과 관련하여-”, **법학** 제10권 제1호 (1968), p. 26.

23) 백충현, “영토분쟁의 해결방식과 증거”, **법학** 제23권 제4호 (1982), pp. 17-37.

24) 이상면, “독도영유권의 증명”, **법학** 제42권 제4호 (2001), pp. 215-241.

25) 정인섭, “한국전쟁이 국제법발전에 미친 영향 - 포로송환 문제를 중심으로-”, **법학** 제41권 제2호 (2000), pp. 217-236.

26) 이한기, “한국국제법학 삼십년의 회고”, **법학** 제19권 제1호 (1978), p. 157.

27) 배재식, “코르푸해협사건(국제판례)”, **법학** 제1권 제1호 (1959), pp. 233-241.

28) 배재식, “새 해양법과 군함의 지위”, **법학** 제24권 제2·3호 (1983), pp. 32-43.

29) 박종성, **법학** 제18권 제1호 (1977), pp. 294-320.

선포에 따른 한일간의 해양관할권 문제,<sup>32)</sup>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체결에 따른 독도와 그 주변수역에 대한 문제<sup>33)</sup> 등에 대해 논문을 발표하였다.

## 5. 인권

서울대학교 국제법학의 기초를 쌓는 데 이한기 교수가 선구적 역할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배재식 교수의 공적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배재식 교수는 특히 국제인권법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를 수행하여 학계의 이론 및 정부의 실행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그의 문제 의식은 정인섭 교수에 의해 계승·발전되고 있다. 배재식의 교수는 다작은 아니었지만 매우 정치하고 밀도 높은 글들을 작성했으며 특히 엄정한 학문적 입장에서 용기 있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재일한인의 국적문제에 관하여 “대일강화조약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또한 한일협정도 그것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까닭에, 그들의 국적은 법적으로 여전히 변경되지 않은 채로 있으며, 따라서 아직도 일본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sup>34)</sup> 그는 이러한 결론에 대해 “국가 이익(정책)론이나 민족주의적 감상론 또는 체면론에서 오는 반론이나 반대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어떠한 국가적 이익이나 정책도 그들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몰수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할 수도 없다”고 강조하였다.<sup>35)</sup> 한일기본관계조약 제2조의 해석과 관련해서도 “『당초부터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한국측의 주장과 『무효』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일본측의 고집과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간주하면서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sup>36)</sup> 이러한 주장은 1965년 기본조약 체결 당시 및 그 후의 정부의 공식적

30) 이상면, “튀니지아·리비아 간의 대륙붕에 관한 사건”, **법학** 제23권 제4호 (1982), pp. 104-114; “미국·캐나다 간의 메인만 해양경계선 획정사건”, **법학** 제25권 제4호 (1984), pp. 224-231.

31) 이상면, “해양경계선상의 에너지개발에 있어서의 Unitization 원칙의 적용”, **법학** 제31권 제3·4호 (1990), pp. 122-128.

32) 이상면, “경제수역선포에 따른 한일 간의 해양관할권 문제”, **법학** 제38권 제2호 (1997), pp. 14-31.

33) 이상면, “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와 그 주변 수역의 법적 문제”, **법학** 제40권 제3호 (1999), pp. 109-132.

34) 배재식, “기본적 인권과 국제법 - 특히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의 본질을 구명하기 위하여 -”, **법학** 제8권 제1호 (1966), p. 57.

35) 같은 글, p. 58.



입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서 학문적 엄정성 및 중립성에 대한 깊은 인식과 확신 없이는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배재식 교수는 1966년 논문 이후에도 1965년 재일교포지위협정에 따른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와 대우를 분석한 글을 1972년에 발표하였고,<sup>37)</sup> 재일교포 문제를 소수민족보호의 관점에서 고찰한 논문을 1981년에 법학지에 상재하였다.<sup>38)</sup> 1986년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개최한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에서 같은 주제에 대해 기조연설문을 발표하였다.<sup>39)</sup> 재일교포에 관한 국제법적 문제는 1986년의 국제학술대회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어졌다.<sup>40)</sup> 재일교포 문제의 배경을 이루는 한일 간의 법적 제문제는 배재식, 백충현, 이상면 교수의 공동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되었다.<sup>41)</sup>

배재식 교수의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를 심층적으로 고찰한 정인섭 교수는 1996년 북한의 신대외민사법 시행에 따른 재일교포의 가족법 문제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sup>42)</sup> 국제인권법의 문제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연구해 온 정인섭 교수는 2007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군장병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논문을 게재하였다.<sup>43)</sup>

백충현 교수는 인권법과 일정한 연관을 맺고 있는 범죄인 인도제도, 특히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에 대한 정치한 분석을 1975년 발표하였다.<sup>44)</sup> 정인섭 교수도 국

36) 배재식, “강박으로 체결된 조약의 성질 및 효력”, **법학** 제10권 제2호 (1968), p. 61.

37) 배재식,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및 대우 -실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법학** 제13권 제1호 (1972), pp. 5-34.

38) 배재식, “소수민족의 보호에 관한 연구(I) -한인계 소수민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소고-”, **법학** 제22권 제4호 (1981), pp. 42-57.

39) Jae-Shick Pae,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the Law of Nations-Essential Problems of Legal Status of the Korean Inhabitants (Minority) in Japan”, **법학** 제27권 제1호 (1986), pp. 1-7.

40) Onuma Yasuaki, “Legal Statu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Charn-Kiu Kim, “Some Minority Problems in International Law”; James Crawford, “Territorial Change and the Status of Inhabitants”; Choong-Hyun Paik, “International Leg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George A. De Vos, “Japanese Citizenship and Korean Ethnic Identity: Can They be Reconciled? A Psychocultural Dilemma”.

41) 배재식·백충현·이상면, “한일간의 법적 제문제 -1965년 제조약의 시행상의 문제점-”, **법학** 제35권 제2호 (1994), pp. 1-46.

42) 정인섭, “북한의 신대외민사법시행과 재일교포의 가족법 문제 -북일수교 후 일본에서의 취급 예상-”, **법학** 제37권 제2호 (1996), pp. 234-260.

43) 정인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군장병 인권”, **법학** 제48권 제4호 (2007), pp. 35-62.

제형사법과 인권법이 만나는 지점의 주제에 대해 2002년 논문을 상재하였다.<sup>45)</sup> 2009년 국제형사재판소장으로 선임된 송상현 교수는 아동의 인권에 대한 논문을 작성한 바 있고,<sup>46)</sup> 국제형사재판소와 로마규정에 대해서도 법학지에 글을 게재하였다.<sup>47)</sup>

## 6. 조약법

국제법의 양대 법원의 하나로 지칭되는 조약은 국제법연구의 주요대상이다. 이미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법학지에는 국제법원(法源)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인데 같은 연명이 조약법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배재식 교수가 한일 기본관계조약 제2조의 해석을 둘러싼 한일 간의 논쟁에 관해 1968년 논문을 작성하였음은 이미 위에서 보았다. 조약 체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실행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정인섭 교수는 최근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조건부 동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글을 법학지에 게재하였다.<sup>48)</sup> 김찬규 교수는 1977년 신생국과 조약승계의 문제를 다룬 논문을 발표하였다.<sup>49)</sup>

## 7. 문화재의 기원국으로의 반환

외규장각 도서 문제는 현재 한·불 간의 외교적 현안이 되어 있고 한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이 문제가 공론화된 계기는 백충현 교수와 이태진 교수(당시 서울대 국사학과)의 발의로 1991년 10월 서울대학교 총장이 외무부 장관 앞으로 프랑스 정부에 대해 반환 요청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협조서를 제출한 사실이다. 외무부는 이를 받아 차관 명의로 프랑스 외무부에 정식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냈다.

44) 백충현,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법학** 제16권 제2호 (1975), pp. 69-96.

45) 정인섭,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죄와 이근안·수지 김 사건”, **법학** 제43권 제1호 (2002), pp. 159-179.

46) 송상현, “어린이의 법적 권리보호에 관한 문제점”, **법학** 제35권 제2호 (1994), pp. 155-167.

47) 송상현, “로마조약(The Rome Statute)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소고”, **법학** 제44권 제3호 (2003), pp. 239-278.

48) 정인섭,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조건부 동의”, **법학** 제49권 제3호 (2008), pp. 159-180.

49) 김찬규, “신생국과 조약의 승계”, **법학** 제18권 제1호 (1977), pp. 321-338.

1991년 10월 협조서를 제출한 이후 백충현 교수와 이태진 교수 두 분은 외규장각 도서반환 문제에 대해 지속적·체계적인 노력을 쏟아 한국 정부의 협상 방안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한 국내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1999년 4월에 『외규장각도서 무엇이 문제인가?』란 이름으로 책을 간행하여 프랑스에도 배포함으로써 외규장각 도서를 둘러싼 정확한 역사적 사실과 한국측 입장을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백충현 교수는 1866년 프랑스 해군이 외규장각 소장 도서 대부분을 그 건물과 함께 소훼(燒燬)한 사실의 국제법적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외규장각 도서반환 문제가 무원칙한 외교적 절충을 통해 타결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아직까지 이 문제가 “정의의 회복과 미래 지향적인 한불 교류를 위해 한국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백충현 교수의 주장에 기초하여 해결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문제의 발굴, 공식적 제기, 한·불 간 협상 전과정에 걸친 그의 공헌은 매우 컸다.

백충현 교수는 전시 또는 식민지시기 유출문화재의 기원국으로의 반환을 위해 학문적·실무적으로 활발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1989년에는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글을 법학지에 발표하였다.<sup>50)</sup> 또한 1990년 중반 UN 아프가니스탄 인권특별보고관으로 활동 시 아프가니스탄의 문화재가 대량 약탈·유실되는 사태를 ‘문화적 집단살해’(cultural genocide)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강력히 규탄하였다. 백충현 교수를 도와 문화재의 국제적 보호 문제를 연구해 온 이근관은 2003년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재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글을 법학지에 게재하였다.<sup>51)</sup>

## 8. 남북한 관계

1945년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분단국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남북한 간에는 매우 복잡다기한 국제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반도 상에 하나의 국가만이 존재하는지 여부, 한반도상의 합법정부의 문제(특히 UN총회결의 제195호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 ‘6·25동란’ 또는 ‘한국전쟁’의 국제법적 성격, 현재 한반도 상에 전쟁상태가 종료되었는지 여부,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논란 등 매우 난해

50) 백충현, “해외유출·불법반출문화재 반환의 국제법적 규제”, **법학** 제30권 제3·4호 (1989), pp. 37-64.

51) 이근관, “동아시아지역의 문화재보호 및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 제44권 제3호 (2003), pp. 91-134.

한 법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푸펜도르프가 신성로마제국의 국가형태에 대한 논구를 행한 후에 내린 결론이 “괴물과 유사하다(simile monstro)”는 것이었는데, 현재 남북한 간의 관계를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도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법학지도 여러 논문을 통해 남북한 관계를 다루고 있다. 배재식 교수는 1975년 한국 휴전의 법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하였고,<sup>52)</sup> 이 문제는 2000년 제성호 교수,<sup>53)</sup> 백진현 교수<sup>54)</sup>도 고찰하였다. 2008년에 이근관 역시 한국 정전협정의 법적 성격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문제를 국제법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sup>55)</sup>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한반도 상황이 갖는 특수성과 이 특수성에 상응하는 국제법적 해결책 강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한국전쟁의 법적 성격, 전쟁 당시 전시국제법의 적용실태에 대해서도 논문이 발표되었다.<sup>56)</sup>

## 9. 기타

위에서 언급한 주제 이외에도 법학지에서는 다양한 국제법 문제(국제소송절차상 중간보전조치,<sup>57)</sup> 외국인재산의 국유화,<sup>58)</sup> ICJ 판결에 대한 평석<sup>59)</sup> 등)에 대한 글들이 발표되었다.

52) 배재식, “한국휴전의 법적 제문제”, **법학** 제16권 제1호 (1975), pp. 31-56.

53) 제성호, “한국정전협정의 이행실태”, **법학** 제41권 제2호 (2000), pp. 239-271.

54) 백진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문제”, **법학** 제41권 제2호 (2000), pp. 277-298.

55) 이근관, “한반도 중전선언과 평화체제 수립의 국제법적 함의”, **법학** 제49권 제2호 (2008), pp. 164-192.

56) 조시현, “한국전쟁의 국제법적 성격 -무력행사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법학** 제41권 제2호 (2000), pp. 19-38; 임덕규, “6·25전쟁과 전시국제법의 적용실태”, *Ibid.*, pp. 185-213; 제성호, “한국정전협정의 이행실태”, *Ibid.*, pp. 239-271.

57) 정일영, “국제재판상의 중간보전조치”, **법학** 제4권 제1·2호 (1962), pp. 246-269; 제성호, “국제사법재판소의 중간보전조치”, **법학** 제25권 제4호 (1984), pp. 222-253.

58) 이한기, 외국인재산의 국유화, **법학** 제10권 제2호 (1968), pp. 5-26.

59) 오재근, “라마로부터 이전된 화폐금사건”, **법학** 제3권 제2호 (1962), pp. 407-414; 이한기, “인터한델 사건”, **법학** 제6권 제1호 (1964), pp. 120-148; 백충현, “IRAN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사건”, **법학** 제22권 제4호 (1981), pp. 42-57.

### III. 법학지에 발표된 국제법 논문의 공통적 경향

이 글의 서두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법학지에 실린 80여 편의 국제법 논문은 다양한 저자들이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다양한 시각 하에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논문들 전체를 관통하는 방법론적 특징을 잡아내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기 교수가 서울대학교 국제법학의 초석을 놓고 이끌어왔으며 또한 이한기 교수의 학문적 자장이 상당한 정도 법학지 논문에도 미치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착목하여 법학지에 실린 국제법 논문의 공통적 성향 또는 지향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 1. 한국적 국제법학 수립에의 열망<sup>60)</sup>

이한기 교수가 자신의 국제법학의 방법론적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장소의 논리’이다. 그는 이 비판적 프리즘을 통하여 현대 국제법이 표방하는 일반성·보편성이 사실은 이 규범체계의 유럽중심성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법의 엄연한 이데올로기성과 대결하는 인식론적·실천론적 용기를 결여한 주변부 지역 국제법학자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통박하고 있다.

一般 國際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라는 疑問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이 實은 歐美的 「場所」를 契機로 한 것임을 發見하고 이러한 國際法을 그대로 우리에게 타당하는 一般 國際法으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學問의 위험한 後進性」이라고 판단하였다.<sup>61)</sup>

60) 이 절의 일부는 다음 글에 기초하고 있다. 이근관, 기당 이한기 박사의 국제법학의 재조명 - 동아시아 국제법 수용사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 서울국제법연구 제12권 제1호(2005).

61) Ibid., p. 6. 이동주 교수는 『國際政治原論』 서문에서 「장소의 논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또 하나의 疑問은 무엇인고 하면 - 從前의 一般政治學은 果然 누구를 爲한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 내 研究가 若干 進陟함에 따라 ... 歐洲의 民主主義는 不可避하게 歐洲의 繁榮 위에 立脚하고 있으며, 또 그 歐洲의 繁榮은 現實의으로 後進地域에 對한 植民地支配에 밑받치어 있다는 嚴然한 사실에 부닥치게 되었다. 歷史的인 國際的不平等 위에 樹立된 民主政體와 그것을 類型化하여 엮어놓고 一般妥當의이라고 일컫는 政治學을, 國際的인 彼支配地域의 學徒들이 當然한 것으로 알고 工夫한다는 것은 기가

그러면 근현대 전환기 상당 기간 동안 ‘국제적인 피지배지역’이었던 한국이라는 구체적 「장소」라는 견지에서 바라본 국제법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가? 이한기 교수에 따르면 전통 국제법이 자임하였던 보편국제법(universal international law)으로서의 역할은 세 개의 국제법이 정립하고 있던 1960년대 말의 국제정치적 현실에 부합되지 않았다. 당시 국제사회에는 구미국제법, 공산권 국제법, 그리고 아시아·아프리카 권의 국제법이 정립·대치의 상태에 있었다. 이들 세 개의 진영은 각기 독자적인 국제법의식을 지니고 있었고, 이들 지역질서 간을 다리 놓는 보편국제법이란 결국 호혜적인 것, 기술적인 것 이외에는 그 때 그 때의 정치적 편의에 따라 효용이 바뀌는 것이다.<sup>62)</sup> 국제법은 결코 정태적인 규범체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내의 행위자(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제국)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변화가능한 동태적 질서로 표상된다. 그가 영토 문제에 관한 국제법이 “Asia 및 Africa의 廣大한 地域에서 非植民化와 新生國의 大量 出現이라는 impact 下에 지금 대단한 革新過程을 겪고 있”<sup>63)</sup>다고 평가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전통국제법 시대에 국제법적 인격과 실행을 사실상 독점하였던 유럽에 대하여 사회주의권 및 아시아·아프리카권이라고 하는 강력한 타자(他者)가 대립하고 있는 ‘커다란 변혁기’에 한국이라는 「장소」에서 국제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이한기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막힐 노릇이 아닐가. ... 더구나 現實的인 西洋政治學은 그것이 내세우듯 하는 事實認識의 效用보다는 오히려 西洋的인 政治價値를 體系化하는 效用이 크다는 것은 나에게 一大衝擊이 아닐 수 없었다. 이리하여 나는 從來의 研究方法를 다시 고치어, 내대로 「場所의 論理」라고 부르는 새 見地를 取하게 되었다. 무엇이냐 하면, 政治學이 成就한 一般類型 그리고 西洋의 政治價値가, 個別的地域에 있어서는 어떠한 變異를 일으키며 또 어떠한 「權威」의 役割을 하느냐 하는 것을 檢索하자는 것이었다. 애當初 普遍妥當的인 政治法則 또는 原理라는 觀念은 ... 한편 事象認識의 一手段일 수도 있으나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國際寡頭政治를 擔當하는 強大國의 政治觀念 및 價値를 一般妥當化시키는 效果를 간직하고 있는 것을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이 見地에서 보면 「場所의 論理」라고 할 수 있는 方法의 導入은 이러한 事象認識의 政治的歪曲을 바로잡는 데 제법 役割이 크다.

이리하여 나는 從來 通用하는 國內政治學으로서의 一般政治學은 其實 歐美的 「場所」를 契機로 하는 所以를 于先 正確히 把握하여야 되며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妥當하는 一般政治學으로 攝取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學問의 危險한 後進性이라고 判斷하였다.” pp. 2-3.

62) 韓國의 領土, p. 7.

63) Ibid., p. 3.

韓國은 그 독특한 國際的 位置로 보아 現在 압도적인 西歐圈의 영향 밑에 있으나 國際法에 대한 國家의 實行에 관한 限 이른바 「Asia的 傾向」과 一致하고 있다. 때로는 傳統 國際法에 대한 性向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을 排斥하기도 하는 選擇의 態度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고 韓國을 포함한 Asia諸國의 國際法에 대한 態度가 西歐의인 意味에 있어서 無法 또는 不法이고 이에 대하여 西歐 諸國만이 「法慣習」(law-habit)을 獨占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

따라서 우리는 自由陣營의 實定 國際法學과 같이 common law의 傳統을 이어 國際國內 法廷의 判決에서 實定的인 法規를 檢出하는 것과 같은 接近方法에 始終할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韓國이 參加하고 同意한 共通의 法規를 析出하여 이것을 法理解에의 出發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sup>64)</sup>

이러한 주장에는 한국이 처해 있는 실존적 딜레마가 잘 드러나 있다. 비록 국제법에 대한 국가적 실행의 측면에서 “현재 압도적인 서구권의 영향 밑에 있으나”, 중국적인 지향점은 한국이 위치하고 있는 구체적인 「장소」인 아시아적 관점에서 유럽중심적 전통국제법에 비판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는 영토문제에 대한 논의에서도 반복되어, 영토국제법상의 여러 개념의 정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표하면서, 망끼에 맞 에끄르오 사건 등에 대한 정치한 분석을 통하여 이들 판례가 한국의 입장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면밀히 추적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결국 국제법은 아시아인의 규범적 경험과 원망(願望)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그들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이한기 교수의 실정국제법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은 이 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도 가해져서 “西歐的 經驗이 아니라 아세아적 叡知”에 기초하여 “帝國主義 國家의 植民地 統治를 合法化하는 그러한 國際法이 아니라 억울하게 奪取된 領土를 正當한 原所有者에게 되찾아 주는 그러한 國際法을 創造하고 發見”할 것이 기대되는 「아세아地域 國際司法裁判所」의 창설을 제안하고 있다.<sup>65)</sup>

이한기 교수의 문제의식은 백충현 교수를 비롯한 후학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백충현 교수는 이한기 교수의 고회 기념논문집의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기당 선생의 생애와 학문」이라는 글에서 이한기 교수의 업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64) 같은 글, pp. 7-8.

65) 같은 글, pp. 304-305.

총체적인 평가를 행하고 있다.

광복 후 우리나라의 모든 학문영역이 그러하였듯이 학문적 전통과 기초가 일천했던 시대에 한 선구자적 학자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 국제법학계의 장래를 밝게 해 주는 은혜이었다 해도 결코 과장일 수 없다. 기당선생의 학자로서의 발자취는 곧 한국 현대국제법학사의 살아 있는 축도인 것이며, 초기의 국내학자들이 지나칠 정도로 서구이론과 가치에 집착하거나 이를 전수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었으나 선생의 학문은 역사의 눈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헤침으로써 서구이론의 미궁을 탈출할 수 있는 자각의 계기를 마련한 노정이었다. 따라서 선생의 이론과 논리의 맥은 항상 국가를 위해서는 공리적이고 인류를 위해서는 도덕적일 수밖에 없는 갈등과 고민의 연속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평가에서 주목할 부분은 “초기의 국내학자들이 지나칠 정도로 서구이론과 가치에 집착하거나 이를 전수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었으나 선생의 학문은 역사의 눈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헤침으로써 서구이론의 미궁을 탈출할 수 있는 자각의 계기를 마련한 노정”이라고 본 점이다. 바로 이 지점이 백충현 교수의 국제법학을 관통하는 주도동기(Leitmotiv)이자 통주저음을 형성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백충현 교수가 학자로서의 일생을 통하여 끊임없이 강조하였던 것이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국제법적 문제를 한국 나름의 독자적인 시각에서 파악하여 한국의 국가이익과 국제적 차원의 대의명분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학문적 노력을 통하여 투입할 수 없는 절대적 타자로서 한국학자들을 압도했던 국제법을 한국 토양에 뿌리 내리고, 더 나아가 한국의 국제법적 실행과 이론을 주류 국제법학에 투사함으로써 서구 중심적 국제법의 다성적(多聲的, polyphonic) 재구축을 이루어 내는 것이 학문적 꿈이자 목표였다. 이한기 교수가 무엇보다도 한국에 의하여 해석되고 적용된 국제법(International Law as Chiefly Interpreted and Applied by Korea), 즉 무어(Moore), 핵워드(Hackworth), 화이트먼(Whiteman) 등이 만든 미국국제법제요(Digest of International Law)와 같은 한국 국제법제요(Korean Digest of International Law)를 편찬하는 일을 가장 시급한 일로 꼽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백충현 교수 역시 국제법 분야의 한국법의 실행과 이론적 관점을 충실히 전달하는 영문 저널의 출판의 중요성을 자주 언급하였다. 그의 정년맞이 기념으로 출간된 영문 책자의 제목이 『한국적 시각에서의 국제법(International Law in Korean Perspective)』이고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이 한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백충현 교수가 정인섭 교수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국제법연구』지에 ‘한국의 국제법 실행’이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한국 법원의 국제법 관련 판결, 한국의 조약 체결 현황, 국제관계 관련 국내 신법령 등의 소개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던 것도 동일한 문제의식의 발로였던 것이다. 기실 한국의 대부분의 국제법학자가 한국적 시각에서의 국제법학의 재구축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지만 이 엄청난 과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난감해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적 시각의 지나친 강조가 자칫하면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로 전락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양 국제법이 수세기를 통하여 축적한 방법론적 견고성과 연구업적의 절대적 양으로 인해 이 거대하고 단단한 학적 체계에 맞설 인식론적 용기를 동원하기조차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한기 교수와 배재식 교수의 학통을 이어받은 백충현 교수는 스승들의 비판적 문제의식을 충실히 계승하여, 한국적 시각이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기존의 국제법 문제를 분석하고 한국의 현실에 즉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학문 자세는 이상면 교수, 정인섭 교수에 의해서도 계승되어 이상면 교수는 유럽국제법의 한국수용에 대한 일련의 논문을 법학지에 발표하였고, 정인섭 교수는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한국의 조약체결 실행에 대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법학지에 실린 일련의 논문들, 특히 국제법방법론, 국제법 수용사, 영토문제에 관한 국제법 글들은 이한기 교수가 자신의 학문적 과제로 설정한 한국적 국제법학의 수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축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으며, 그의 문제의식은 후학들에 의하여 계승되어 그들의 학문적 과제로 설정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제법학’의 이러한 경향, 즉 한국적 시각에 기초한 비판적 국제법학의 재구축 지향은 법학지에 실린 논문들을 관통하는 기본정신이라 할 수 있다.

## 2. 학제적 연구방법

법학지에 실린 국제법 논문들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경향은 많은 글들이 국제법 문제에 대한 훈고학적 해석에 그치지 않고, 국제정치, 역사 등 관련 학문분야의 자료와 관점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한기 교수는 자신이 제기한 보편역사적 문제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단지 사상사적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정치·사회·경제 등 여러 분야의 문헌을 종합적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기실 이 주제에 관한 이한기 교수의 논문들은 동아시아에서의 국제법 수용사에 대한 비교분석이라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동아시아에서의 비대칭적 근대화의 등장 요인에 대한 거시적이며 종합적인 검토에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제법 역사를 소재로 한 문명론적 담론의 풍격을 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백충현 교수 역시 최서면 원장(동경 국제한국학연구원), 이태진 교수(서울대 국사학과) 등 역사학자와의 체계적·장기적 협력을 통해 학제간 연구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줬다. 최서면 원장과의 협력이 주로 영토 관련 사료의 체계적 수집·정리였던 데 비해 이태진 교수와의 학제간 협력은 일본의 한국병합을 포함한 한·일 관계 전반, 외규장각 도서 반환 등 실체적 문제를 국제법과 역사학의 복안적(複眼的)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책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법학지에 실린 백충현 교수의 글들은 이러한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

### 3. 외교실무/현장과의 긴밀한 연계

법학지에 실린 논문들의 또 하나의 경향은 외교실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긴밀한 연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논문들은 국제법 이론상의 추상적 문제를 깊이 있게 천착하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글들은 우리 외교실무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한국이라는 구체적 맥락 하에서 분석하면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한기 교수는 독도 등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영토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면서 ICJ에의 재판부탁가능성 등의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였다. 배재식 교수의 경우에도 한일 간 최대현안의 하나였던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처우 문제에 대해 정치한 이론 전개에 기초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였다. 백충현 교수는 범죄인인도 제도에 관해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1974년의 문세광 사건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문화재 반환에 관한 그의 논문은 외규장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정에서 작성되었다.

법학지에 실린 국제법 논문들이 일반적으로 높은 실천적 성격을 띠었던 것은 이한기, 배재식, 백충현 제 교수와 외교부 실무자 사이에 존재했던 긴밀한 협조관계와도 일정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들이 외교부, 특히 조약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 외교관들이 국제법적 현안과 관련하여 모교 국제

법 교수들의 큰 도움을 받았음은 권병현 대사, 김석우 차관 등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 출신 외교관의 회고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IV. 결어

이 글에서 필자는 지난 반세기 동안 법학지가 국제법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조감하였다. 법학지는 국내 법학계를 선도해 온 학술지답게 국제법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학문적 업적을 축적하였다. 이한기 교수를 중심으로 형성된 서울대학교 국제법학은 특히 한국적 국제법학(노명준 교수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자아준거적 국제법이론’)의 수립을 위해 노력해 왔고, 방법론적으로 학제적 연구를 통해 많은 성과를 올렸으며, 또한 외교실무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법 연구의 실천성을 유지해 왔다.

한국 법학이 지난 반세기 동안 장족의 발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법학’, ‘번안법학’적 성향을 완전히 탈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제법학 역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서양의 학풍과 이론을 소개하는 데 그치는 연구자세가 상당 정도 남아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국제법학의 정립을 위해 노력해 온 선학들을 학문적 성과를 정당하게 재평가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법학지에 실린 국제법 관련 논문들에 대한 ‘정밀한 재독(再讀)’이 절실히 요구되는 소이다.

법학지의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성취는 장래 우리 앞에 놓인 학문적 과제의 크기와 무게를 약역하게 보여 준다. 다른 한편 현금(現今) 국제법학을 둘러싼 현실에 눈을 돌려볼 때, 우리의 가슴은 무거워진다. ‘세계화’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국제법 연구 및 교육에 대한 관심은 날로 저하되고 있고, 외교실무계와의 연관도 예전에 비해 약해지고 있으며, 국제학계에서 한국국제법학계의 위상은 여전히 낮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지난 50년간 법학지를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의식의 끈을 놓치지 말고, 새로운 도약을 향해 가일층 노력해야 할 책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